데스크 시각

생활인구 교부세, 진짜 소멸지역엔 '그림의 떡'

김대성
전남 서·중부 전북 취재부장

정부가 하는 일에 딴지를 걸고 싶진 않지만 워낙 지역에 중요한 사안이라 언급하지 않을 수 없다. 정부가 소멸위기에 처한 지역을 대상으로 산정하는 '생활인구'에 대한 것이다. 행정안전부는 인구감소지역을 대상으로 산정하는 생활인구를 내년부터 지방자치단체에 배분하는 보통교부세 산정 기준에 포함하기로 하면서 지자체별로 희비가 엇갈릴 전망이다.

대도시와의 접근성에 따라 생활인구가 크게 차이 나는 데다 주민등록인구가 많은 지역이 오히려 생활인구로는 역전당하는 사례가 속속 나타나고 있다. 여기에 생활인구 산정 대상에서 제외된 인구관심지역(전국 18개 시·군·구)에선 형평성 논란을 제기하며 확대 적용을 요구하고 있어 제도 정착까지 상당한 진통이 예상된다.

성과 속에 묻힌 역차별의 딜레마

생활인구라는 개념은 2023년 1월 1일부터 시행된 '인구감소지역 지원 특별법'에 처음 도입된 용어다. 주민등록법에 따라 주민으로 등록한 사람과 통근·통학·관광 등의 목적으로 주민등록지 이외의 지역을 방문하여 하루 3시간 이상 머문 횟수가 월 1회 이상인 사람 그리고 출입국관리법에 따라 외국인등록을 하거나 재외동포의 출입국과 법적지위에 관한 법률에 따라 국내 거소 신고를 한 사람이다.

생활인구 제도의 도입은 새로운 인구관리 정책이 필요하다는 지적에 따라 이뤄졌다. 기존의 상주인구(특정 지역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사람) 중심 정책이 국가 전체적인 인구 감소 추세 속에서 별다른 실효가 없다는 인식에서다.

시행 3년째를 맞는 제도가 성과를 내는 것도 사실이다. 전남 지역을 비롯해 지자체들의 반응도 좋다. 최근 통계청이 발표한 '2024년 4분기 생활인구 산정 결과'에 따르면 지난해 10월부터 12월까지 전남 16개 군 단위 인구감소지역의 월평균 생활인구 규모는 10월 390만7990명, 11월 379만6570명, 12월 304만446명으로 400만명대에 달했다. 이는 등록인구 70만명의 5배를 웃도는 수치다.

이 기간 전국 체류인구 하락에도 불구하고 생활인구의 주를 이루는 숙박형 체류인구가 상대적으로 안정세를 유지하는 등 좋은 흐름을 이어갔다. 특히 1일 숙박이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했으며 21일 이상 장기 숙박인구 비중이 상대적으로 높은 지역에 경북, 경남 등과 함께 전남이 포함됐다.

하지만 결과와는 달리 생활인구 맹신 속 부작용을 우려하는 목소리도 있다. 특히 내년부터 시행되는 전국 89개 인구감소지역을 대상으로 배분하는 보통교부세가 형평성과 역차별 논란에 휩싸일 것이 예상된다.

문제는 생활인구가 대도시 접근성에 따라 자자체별로 크게 차이가 난다는 점이다. 생활인구에 월 1회 이상 하루 3시간 이상 체류하는 사람이 포함되다 보니 인구가 많은 대도시에 가까운 지자체가 유리하다. 아무래도 대도시 사람들은 가까운 거리에 있는 지자체에 상대적으로 더 많이 간다.

이에따라 생활인구 산정은 주민등록인구가 많은 지자체가 더 적은 보통교부세를 받게 되는 경우가 생길 수 있다. 실제로 1028개의 섬으로 이뤄진 신안군의 지난해 12월 기준 생활인구는 14만6180명(주민등록인구 3만8173명)이다. 그러나 같은 기간 광주에서 1시간 내 거리인 함평군은 주민등록인구가 3만10명에 불과하지만 생활인구는 16만4671명으로 신안군보다 많다. 광주와 인접한 담양군 생활인구도 32만9314명(주민등록인구 4만4623명)으로 거리가 약 2시간 떨어진 고흥군 21만9237명(주민등록인구 6만190명)보다 많다. 이를 토대로 교부세가 산정될 경우 도서 지역과 농어촌 등 낙후지역이 또다시 차별받을 수 있다고 우려하고 있다.

생활인구 추이는 지역·계절별 변화가 심해 생활인구는 물론 근원적 차원에서 인구를 늘리기 위한 장기적 대책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오는 이유다.

지역에 최대 파급효과 낼 방안을

전문가들은 생활인구 정책이 성공하려면 무엇보다 그 '구성'과 '질'에 주목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단순한 체류자의 숫자보다 이들이 얼마나 지역소비와 일자리, 혁신의 파급력이 있는지 지역경제에 실질적 활력을 불어넣는 인구인지를 따져야 한다는 것이다. 이런 전략은 지역별로 특화된 체류환경 조성, 생활권 중심의 서비스 다변화, 그리고 빅데이터나 통신·금융데이터 등 실시간 인구 분석 기술을 활용한 맞춤형 정책으로 구체화하고 있다.

이제 남은 숙제는 더욱 체계적이면서도 과학적인 생활인구 정책의 정착이다. 각 지자체는 거점별 인구와 시설을 분석해 생활인구가 경제와 사회에 최대의 파급효과를 낼 방안을 개발해야 한다.

정부가 인구감소지역에 대해 보통교부세 배분 방식을 생활인구 산정 기준으로 전환한 것은 지역소멸을 막기 위한 불가피한 조치로 이해되는 면이 있다. 하지만 중요한 것은 역차별을 받는 지자체에 대한 개선 방안도 마련하는 것이다. 줘도 먹지 못하는 그림의 떡이 되지 않도록 부작용이 있다면 이를 최소화할 수 있는 보완대책이 필요하다.

은펜칼럼

학생과 전공의의 자리 찾기에 대한 단상

심상돈
동아병원 원장

2000명 의과대학 증원이라는 국가폭력에 의해 학생들과 전공의들이 학교와 병원 밖으로 내 몰린지 1년 그리고 반이 지났다. 내란과 폭동의 계엄. 그 중심 무리들을 몰아내고 새 정부를 선출하였다. 부서진 민주주의를 다시 일으켜 세우고 무너진 일상도 회복하고 있지만 내란과 탄핵의 국가적 수치심과 망가진 국가는 아직 국민들의 몫으로 남겨져 있다.

지난 정부는 전공의 사직을 파업으로 규정하고 행정명령으로 의료현장 복귀를 압박하였다. 보건의료노조의 파업 당시 응급, 중증의료분야는 제외하였다는 명분과 다른 직역 파업의 불법적인 측면을 인용하여 불법적 사직이라는 굴레를 씌우고 협박하였다.

전공의 사직을 다른 시각으로 판단하고 불법화 하였고 그 내부를 분열시켜 조각조각 찢어 놓았다. 전공의들은 물론 학생들까지도 자신들의 공동체 뿐만 아니라 병원과 학교 그 어느 곳에도 함께하지 못했다. 주체성까지도 흔들리고 쪼개져 스스로 자리잡지 못하였다. 학교를 자퇴하고 전공의 수련을 영원히 포기하는 등 의료라는 사회적인 큰 틀을 회피하고 거부하는 상황까지도 발생하였다.

교육부의 학생 복귀 정책과 수련병원들의 하반기 전공의 모집으로 학생, 전공의의 복귀가 시작되었다. 학생과 전공의 대표는 대표자 회의와 환자단체연합회에서 '길어진 의정 갈등으로 인해 불편을 겪고 불안하셨을 국민 여러분'께 사과 하였다.

정작 책임지고 사과해야 할 사람들은 내버려둔 채 학생, 전공의들에게 더 이상 사과와 재발방지 약속을 강요하는 것은 사회구성원에 대한 관용과 제도적 자제에 대한 철학적 빈곤을 사회적 약속과 질서로 포장한 협박일 뿐이다. 학생, 전공의 모두 보호받아야 할 국민이다.

학생들의 학업과 전공의들의 수련을 다시 시작하는 것은 단순히 과거의 '원래 자리'로 다시 돌아가는 일이 아니다. 학생, 전공의의 복귀는 '새로운 자리찾기'이다. 이는 '학생 되기' '전공의 되기' 더 나아가 '의료인 되기'라 할 수 있고 지금까지 이름 지워졌던 과거의 정체성을 과감히 떨쳐내고 스스로를 새롭게 구성하려는 적극적 실천이다.

1년 반이라는 잃어버린 시간과 공간의 빈자리를 묵묵히 지켜왔던 교수님, 다른 직역들을 포함한 의료공동체와의 신뢰를 회복하고 빈자리의 아픈 기억이 잘 치유될 수 있게 최대한 보듬어야 한다. 피치 못할 사정으로 먼저 복귀했던 우리들, 향후 군복무를 마치고 돌아올 우리들과의 관계도 잘 해결하기 위해 내부로부터의 고통을 감내하는 꾸준한 노력이 있어야 한다.

중단되었던 의학 교육과 전공의 수련 연속성을 회복해야 한다. 의학교육은 인문사회과학까지 아우르고 사회적 책무를 다하는 의료인을 위한 교육으로, 전공의 수련은 노동 공백을 메우는 소모의 구조에서 실질적 교육의 구조로의 한단계 발전을 이끌어야 한다.

의료 이용이 줄어든 대학병원과 상급종합병원의 응급, 중증, 필수의료의 현 상태와 동네 의원과 2차 병원을 먼저 이용하는 의료행태가 OECD국가들의 보편적 의료구조이다. 의료전달체계를 비롯한 전반적 의료시스템 재구성의 기회로 삼고 사회공동체와 함께 노력해야 한다. 또한 국가의 안전 체계를 망가뜨린 모든 책임을 국가에게만 떠 넘기지 말고 의료계 내부의 과오에 대한 자기성찰도 해야 한다.

국가폭력의 피해자는 국가의 건강과 안전이며 학생과 전공의의 자리 찾기는 국가폭력으로부터 회복하는 발걸음이다. 혼자서 묵묵히 헤쳐 나가는 고난의 발걸음이 아닌 공동체 구성원과 일상에서 공유하는 책임 있는 발걸음이 되기를 응원한다. 일상은 그냥 흘러 지나가는 모습으로 다가오지만 어제와 오늘의 피와 땀, 약속과 희생을 시간으로 잘 엮어놓은 새로운 내일이다. 다시 무너지지 않고 잘 흘러갈 수 있게 지혜를 모아야 한다.

기 고

애국의 성지 '독도'는 우리 땅

이동범
수필가·교육 칼럼니스트

금년 8월 15일은 우리나라가 일제로부터 해방된 지 80주년을 맞는 광복절이다. 광복 후 많은 세월이 흘렀지만 일본이 아직도 독도가 자기들의 고유 영토라고 주장하는 것을 보면 독도는 지정학적 위치 때문에 일본의 탐욕 대상이 된 것 같다.

역사적으로 볼 때 조선은 1883년부터 울릉도 이주 정책을 실시했다. 이후 울릉도 거주민이 늘어나자 1900년 10월 25일 고종은 '칙령 제41호'를 통해 "울릉도를 울릉군으로 개칭하면서 울도(울릉도) 구역은 울릉전도·죽도·석도를 관할할 것"이라고 했다. 이를 기념해 민간단체인 독도수호대가 2000년 10월 25일을 '독도의 날'로 정했다.

이러한 '독도의 날' 제정 배경에서 알 수 있듯이 독도는 대한민국 영이라는 사실이 명백하다. 독도가 일본 땅이라고 주장하는 일본도 이미 독도가 일본 땅이 아니라고 인정한 바 있다. 1877년 '울릉도와 독도를 시마네현의 지적(地籍)에 올려야 하는가'라는 일본 시마네현 질의에 대해 태정관(총리) 지령에서 '울릉도와 독도는 (조선땅으로) 일본 땅이 아니다'라는 공문을 낸 바 있다.

역사적 사실에도 불구하고 일본 교육부에 해당하는 문부과학성은 2024년 초등학교 교과서 149종 검정을 승인했다. 그 중 초등학교 3~6학년 사회과 교과서에는 독도는 일본의 영토이며 한국이 불법으로 점거하여 일본이 한국에 항의하고 있다는 내용이 기술되어 있다고 한다. 그리고 지도 교과서에는 독도를 죽도(竹島, 다케시마)로 표기하였다.

또한 일제강점기 조선인 징병에 대한 강제성을 약화하고 자발성을 강조하는 방향으로 기술하였다고 한다. 이번에 검정된 교과서는 지난 2019년 검정을 통과한 초등학교 4~6학년 교과서의 내용과 동일한 것으로 드러났다. 독도가 역사적으로도 우리나라 영토이고 일본에서도 독도가 일본 땅이 아니라는 공식문서가 계속 등장하고 있다. 몇 년 전엔 독도가 다케시마가 아닌 한국 발음 '독도'라고 적힌 시마네현 극비 문서가 발견되는 등 일본의 독도 영유권 주장이 터무니없는 거짓임을 뒷받침하는 자료가 나오기도 했다.

일본은 매년 자국이 개최하는 여러 국제행사를 앞두고 독도가 자국의 영토라는 야심을 공공연하게 드러내고 있다. 이러한 과정에서 우리 국민과 교육계가 짊어져야 할 의무와 책임이 매우 막중하다고 본다.

일본은 지난 20여 년간 경제적·군사적 목적으로 독도영유권을 주장하면서 한국을 자극해 국제분쟁지역으로 만들려 하고 있다. '독도의 날'은 이러한 일본의 거짓된 주장과 독도가 대한민국 영토임을 전 세계에 알리고 일본의 끊임없는 영토 야욕으로부터 독도를 지키고자 제정된 것이다.

우리 땅 독도를 지키고 사랑하는 방법은 무엇일까? 요즘 청소년들은 독도에 대해 잘 알지 못할 뿐만 아니라 독도의 날도 전혀 모르고 지나치는 경우가 대부분인 것 같다. 우리 정부는 미래지향적인 한·일 관계를 위해 일본 정부에게 독도가 일본 땅이라는 부당한 주장을 즉각 중단할 것을 요구해 왔다. 또한 일본 정부가 스스로 밝혀온 과거사 관련 사죄와 반성의 정신을 진정성 있게 실천하기를 촉구하고 있다. 앞으로도 대한민국 교육부는 일본 정부의 왜곡과 영토 주권 침해의 부당성을 바로잡기 위해 대 국민 역사교육과 독도교육을 강화해야 한다.

이와 더불어 독도의 날을 정부 기념일로 격상시켜 이를 매년 기념하고 기억하는 노력과 관심이 필요하다. 우리 땅 독도를 지키고 사랑하는 방법으로 청소년들을 비롯한 모든 국민이 독도에 대한 무관심을 관심으로 바꾼다면 충분히 독도를 사랑하고 지켜낼 수 있다고 확신한다.

社說

AI 모빌리티로 '자동차도시 광주' 위상 강화

정부가 광주시에 모빌리티 국가시범도시 조성 용역을 공동으로 진행하자고 제안했다. 국토교통부가 최근 공문을 통해 AI 모빌리티 국가시범도시 조성을 위한 사전 기획과 기본 구상, 기획 연구 용역을 함께 하자고 제안한 것인데 광주가 자율주행 등 미래 모빌리티를 이끌 것이란 기대감을 갖게 한다.

정부의 인공지능(AI) 모빌리티 사업은 AI를 기반으로 자율주행과 미래 모빌리티 기술을 실제 도시에서 실증하고 상용화하는 데 1조5000억원을 투자하는 대규모 프로젝트다. 광주시는 공동 용역을 통해 AI 모빌리티 사업의 기본안을 마련한 후 빛그린산단과 미래차국가산단 부지에서 미래자동차를 비롯한 다양한 이동수단 등 새 제품의 기술을 실증할 계획이다.

광주 도심을 차세대 모빌리티를 주행하고 시험하는 테스트베드로 삼고 장기적으로 도시 전체에 자율주행차 산업 육성을 위한 미래형 도로와 교통 인프라를 구축하겠다는 구상이 다.

광주는 기아차와 GGM(광주글로벌모터스)이라는 두 개의 완성차 공장에서 연산 72만대의 생산 능력을 갖춘 국내 대표 자동차 도시다. 자동차산업이 전기차를 넘어 자율주행차 시대로 접어들고 있는 상황에서 AI 기반 기술은 미래차의 운명을 결정짓는 가장 큰 요인이다. 이런 시점에 광주가 AI를 활용해 자동차를 비롯한 다양한 모빌리티의 테스트베드가 된다면 미래차 분야에서도 충분한 경쟁력을 갖추게 된다.

이번 용역은 산업통상자원부가 추진하는 미래차 클러스터 사업과의 연계 측면에서도 유리한 고지를 점한다는 의미가 있다. 광주시는 꼼꼼한 준비로 공동 용역을 차질없이 진행해 정부의 AI 모빌리티 사업을 실현시키는 계기로 삼아야 한다.

광주의 미래 먹거리인 AI와 자동차 산업의 성공을 위해서도 이번 용역을 잘 준비해 성공적으로 수행해야 할 것이다.

광주보훈병원 진료 공백에 국가유공자 시름

광주보훈병원을 이용하는 국가유공자들이 의사 부족으로 제대로 된 진료를 받지 못하고 있다. 참다 못한 한 국가유공자는 지난 6일 국회 전자청원에 "광주보훈병원 진료과의 절반 이상에 상주 의사가 없어 환자들이 제대로 진료를 못 받고 있다"며 의사 충원을 요청했다.

광주보훈병원의 의사 인력난은 2022년 2월 전문의 12명이 집단으로 퇴사한 이후 해소되지 않고 있어 근본적인 대책이 절실하다.

호흡기내과 전문의가 한 명도 없는 진료과의 경우 초청의 형식으로 타 병원에서 온 의사가 주 2회 진료를 하다보니 진료 횟수 제한과 예약 전쟁으로 환자들의 불편이 계속되고 있다.

광주보훈병원을 이용하는 참전용사 등 국가유공자는 호남에서만 연간 30만명 수준인데 의료진 부족 현상이 3년째 개선되지 않고 있다니 국가보훈부는 무엇을 하고 있는지 묻지 않을 수 없다.

국가유공자 대다수가 고령인 탓에 복잡한 전원 절차를 밟아 다른 병원으로 옮겨가는 것도 쉽지 않다.

보훈병원의 의사난은 비단 광주보훈병원에만 해당하는 것은 아니다. 지난해 8월에는 서울에서 보훈병원을 찾은 국가유공자가 응급실을 전전하다 숨지는 일까지 발생했지만 특단의 대책은 아직까지 나오지 않고 있다.

보훈병원의 의사난은 타 병원에 비해 임금이 적고 일은 많기 때문이라고 한다. 의대 정원 증원을 둘러싼 의정갈등으로 전문의가 이탈했던 점을 감안하더라도 의사난으로 인한 보훈병원의 진료 공백을 지금까지 방치하는 것은 정부의 책임 방기라고 할 것이다.

모레는 광복 80주년이다. 오죽했으면 국가유공자가 국민청원까지 했을까. 서운한 마음을 갖는 국가유공자가 한 명도 없도록 진료 공백을 메우는 데 최선을 다하길 바란다.

無等鼓

80년 만의 미소

광복절이 다가오면 우리는 늘 교과서 속 인물들을 떠올린다. 단호한 눈빛과 굳게 다문 입술, 흐릿한 흑백 사진 속에서만 만났던 독립운동가들이다. 그런데 요즘은 조금 다르다. AI 복원 기술 덕분에 그 얼굴들이 선명해지고 움직이며 심지어 나를 보고 환하게 웃기까지 한다. 마치 긴 세월을 건너와 후손들에게 잘 지내고 있는지 묻는 듯하다.

복원된 유관순 열사의 미소를 처음 보았을 때 오래된 사진 속 침묵이 서서히 풀려나가는 경험을 했다. 옥고로 퉁퉁 부은 얼굴만 기억 속에 각인돼 있다가 열일곱, 제 나이에 맞는 발랄한 걸음으로 환하게 웃는 모습을 보니 뭉클하고 마음의 위로가 되기도 했다. 어떤 이는 독립운동가들이 웃고 있는 영상을 보며 "슬프면서도 찡하다"고 말한다. 또 어떤 이는 "후손들에게 기를 넣어 주시려는 듯 환하게 웃으며 다가오는 모습에 전율을 느꼈다"고도 했다.

AI 복원 작업은 2023년 3·1절을 맞아 국가보훈부가 독립운동가 흑백사진을 컬러로 복원하며 대중적으로 알려졌다. 이후 지방자치단체, 박물관, 기념관 등 공공기관뿐 아니라 민간에서도 활발히 이어졌고 단순한 이미지를 넘어서 영상으로까지 발전했다. 움직임과 표정이 더해지자 마치 시간의 장벽을 뚫고 우리 앞에 걸어 나오는 듯 생생해졌다. 되살려낸 그들의 웃음은 단순한 표정이 아닌 절망 속에서도 희망을 믿었던 사람만이 지을 수 있는 미소다. 김구 선생의 선명해진 사진 속 눈빛에서도, 윤봉길 의사의 또렷해진 미소에서도 같은 울림이 전해진다. 오랜 세월의 안개가 걷히자 그들은 더 이상 박물관 속 초상화가 아니라 우리 곁에서 숨 쉬는 이웃처럼 가까워졌다.

기술이 해낸 일은 단순한 복원이 아니다. 기억을 살리고 역사를 다시 숨 쉬게 하는 일이다. 젊은 세대가 잊고 있던 역사를 '살아 있는 이야기'로 느끼게 해준다. "우리가 지켜낸 이 땅에서 너희는 어떤 내일을 만들어가고 있는가?" 화면 속 그들의 눈빛에서 강한 메시지가 들려오는 것 같다. 올해는 광복 80주년이다. 흑백사진 속에서 걸어 나온 그들의 웃음이 사라지지 않도록 오늘의 우리가 그들의 뜻과 빛을 이어가야 할 것이다. /이보람 예향부 부장 boram@

光州日報 The Kwangju Ilbo
회장·발행인 金汝松 | 논설실장 張必洙 편집국장 崔權一 제작국장 柳濟寬
1952년 4월 20일 창간 1980년 11월 29일 등록번호 광주가 1(일간) | 우) 61482 광주광역시 동구 금남로 224
대표전화 222-8111 / 220-0551〈지사 지국(구독 신청 배달 안내)〉 광고문의 062-227-9600

편집국안내		〈대표 FAX 222-4918〉		경영지원국 220-0515	문화사업국 220-0541
편집부	220-0649	문화부	220-0624	〈FAX 222-8005〉	〈FAX 222-0195〉
정치부	220-0634	예향부	220-0692	기획관리국 227-9600	업무국 220-0551
경제부	220-0648	여론매체부	220-0661	〈FAX 222-0195〉	〈FAX 222-0195〉
사회부	220-0664	사진부	220-0693	디자인실 220-0536	서울지사 02-773-9331
제2사회부	220-0680	디지털부	220-0697		〈FAX 02-773-9335〉

※구독료 월정 15,000원 1부 800원
본지는 신문윤리 강령 및 그 실천요강을 준수합니다